

#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3.1~6)

1993. 6. 30

全賢俊(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柳浩烈(北韓研究室 研究委員)  
南宮鏗(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鄭永泰(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許文寧(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全東震(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目 次

I. 概況	1
1. 北韓對南動向決定要因別概觀	1
2. 月別概觀	4
II. 南北會談의 中斷	6
1. 概觀	6
2. 經過	7
3. 展望	8
III. 北韓의 特使交換提議 및 撤回	9
1. 概觀	9
2. 經過	10
3. 背景 및 意圖分析	13
4. 展望	14
IV. NPT 脫退宣言과 北韓·美國 高位級會談	15
1. 概觀	15
2. 經過	16
3. 意圖分析	17
4. 展望	23

V.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宣言	24
1. 概觀	24
2. 「10대강령」의 內容	26
3. 意圖分析	27
4. 展望	28
VI. 經濟交流 및 經濟協力	29
1. 概觀	29
2. 經過	30
3. 分析 및 展望	32
VII. 朝總聯 動向	35
1. 概觀	35
2. 思想 및 組織強化	36
3. 對北韓 經濟支援	41
4. 教科課程 改編	45
5. 展望	47

# I. 概 況

## 1. 北韓 對南 動向 決定 要因別 概觀

- 북한의 대남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국제환경 요인, 한국내의 요인, 북한자체내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반기중 國際環境要因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 － 첫째, 미·러, 중·러, 일·중 관계 등 한반도 주변 4국관계는 상호 對立構造에서 協力構造로 전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탈냉전의 구도를 심화시키고 아울러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됨을 의미함.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는 공세적 대남적화전략을 구사해온 북한에 체제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대남 적화전략보다는 국내 체제유지 문제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임.
  - － 둘째, 주변 4국은 북한의 NPT(핵확산금지 조약) 탈퇴선언(1993.3.12)에 대해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북한의 NPT 복귀를 기본원칙으로 한 대북 외교압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NPT 탈퇴번복을 위한 외교압력과 NPT 복귀시 대북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제안 등 강은 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 － 셋째, 경제난에 처한 북한은 대내적 차원에서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사상우선노선을 견지할 것이나, 대외적 차원에서

는 고립탈피를 위한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韓國內의 要因을 보면

- 첫째, 높은 국민적 지지를 통해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통일정책 기조로 통일정책수립의 민주적 절차의 강조, 공존 공영, 민족 복리를 천명하고 있음. 신정부의 이러한 統一政策 基調는 남한정권을 반자주·예속정권으로 규정해왔던 북한에 대하여 이념적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 둘째, 經濟的 側面에서는 고임금, 수출 부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안정, 공직자 재산공개, 각종 금융부조리 척결 등을 통해 경제정의의 실천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적 민주화가 정착되고 있음. 또한 신정부가 제시한 안정기조하의 경제발전과 부의 균형적 발전 추진 정책은 부의 불평등심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을 축소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新政府의 과감한 改革 推進으로 계층간 갈등 및 체반 사회소요가 감소됨으로써 「주사파」 활동공간이 줄어들고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재야가 신정부에 동참하고 있음.
- 이러한 정치·경제적 민주화는 남한사회의 갈등을 이용한 북한의 통일전선사업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北韓自體內的 要因을 보면

- 첫째, 경제난과 식량난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北韓 經濟는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 -7.6%

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992년 공장가동율도 30~40%에 불과하고, 무역 또한 1988년 52.4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 1991년에는 전년대비 41.4%가 감소한 27.2억달러를 기록하였는 바, 경제침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일기불순과 주체농법 실패에 따라 최근 3년간 연속 흉작을 기록하여, 1991년의 곡물생산량(쌀과 옥수수)이 481.2만톤에 불과 총필요식량 640만톤에 160만톤이 부족하였고, 1992년에는 200만톤이 부족하였음.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한 자본확보를 위해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임.

둘째, 김일성 사후에 대비 1972년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는 바, 김정일은 1993년 4월까지 당·정·군에 걸친 실질적인 최고통치권자로 부상함. 그러나 북한 최고통치권자는 '수령'의 권위를 확보해야하는 바, 김정일은 그 권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즉 김정일은 내부적으로는 「준전시상태」의 선포나 NPT탈퇴 선언등과 같은 강경책을 통해 군사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유화관계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경제난을 해소해 나가야할 요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2. 月別概觀

- 1월중 북한은 「중·평방」, 「민민전」 방송 등을 통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남한의 차기 정부를 ‘문민정권이 아니라 파쇼정권의 연장’이라고 비난(1.13)을 가 하였음. 또한 '93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발표(1.26)에 대해 한·미 측을 대대적으로 비난할 뿐 아니라, 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명의 의 성명(1.29)으로 ‘모든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 2월중 북한은 남한의 신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고위급회담 분과위·공동위 위원장 공동기자회견(2.25)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과 「특별사찰 소동」 중지를 요구하면서 「문민정치」 시비를 지속하는 한편, “문민정치광고에 환상을 갖지말고 민주화투쟁을 지속하라”, “변혁운동에 동면이 있을 수 없다. 민주화투쟁을 지속하라”고 청년·학생들을 선동함.
- 3월중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요구와 NPT 탈퇴조치의 정당성 선전등을 위한 「남북한·해외청년학생공동결의대회」 개최(3.13), 「민민전」 중앙위 명의의 「시국선언문」 발표(3.15)등을 통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특사와 복학조치 등으로 자유롭게 된 운동권 대학생 및 재야·노동운동가들의 ‘반정부투쟁’과 ‘반전·반핵 투쟁’을 선동·촉구하는 한편,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에 대한 대규모 환영군중집회를 개최하여 이를 ‘사회주의 승리’로 호도함으로써 체제결속에 이용함.

- 4월중 북한은 제9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외세의존정책 포기등 4개대남요구사항과 더불어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4.7), 남한의 정부요인·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해외 친북단체 등 50명에게 편지를 발송하여(4.20) 통일전선형성을 꾀하는 한편, 금년 봄을 「투쟁·항쟁의 봄」으로 규정, 남한의 청년학생과 노동자(4.29), 농민들의 「반정부·반미 연대투쟁」과 종교인들의 「조국통일 투쟁」을 선동(4.5; 4.27)하기 시작함.
- 5월중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대한 남한의 답변을 요구(5.7)할 뿐만 아니라 각당·각파·각계각층의 쌍무적·다무적 대화(5.12)와 전민족적 대화(5.17)를 촉구하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부총리급 특사교환을 제의(5.25)하는 한편, 「조국전선」선언(5.10), 「사회민주당」성명(5.13), 「광주인민봉기 13돌 기념 평양시 군중대회」를 통해 광주문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으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반정부투쟁’선동의 명분 약화에 따라 선동 강도의 유지를 위해 ‘반미자주화’를 더욱 강조함.
- 6월중 북한은 특사교환 방문이 실현될 수 없게된 것과 관련, 그 책임을 한국에 전가(6.26 강성산 총리담화)·비난(6.25 조평통 성명)하고 나서는 한편, 「범민련」(5.29~30, 북경), 「범청학련」(5.29, 국제전화) 공동의장단 회의를 각각 진행, 「제4차 범민족대회」(8.15, 서울)개최와 「판문점 청년학생회담」(6.12)·「제3차 청년학생 축



전」 실현을 결의함으로써 통일전선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자주·민주·민생정치 쟁취」 등 5개항의 「투쟁강령」과 50여개의 「구호」 발표(6.12 「민민전」중앙위)를 통해 반정부 및 반미·반일 투쟁을 선동함.

## II. 南北會談의 中斷

### 1. 概觀

- 1992년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정치, 군사, 교류·협력 분야의 부속합의서 등을 발효시키고, 合意事項을 실천하기 위한 화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그러나 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회담, 대표접촉 등 총 93회의 회담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보다는 외형적인 합의도출의 성과만을 거두었으며, 제8차 고위급 회담 이후 북한이 남한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등을 이유로 공동위원회의 가동 및 9차 고위급 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2. 經過

- 회담중단 이전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측은 부속합의서 내용상의 이견을 타결하여 서명·발효시키고 核問題 및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을 포함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음. 한편 북한측도 동 회담에서 부속합의서 작성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분야의 부속합의서가 모두 채택·발효되었음.
- 동 회담에서 南北韓은 이밖에도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1992년 11월 5일부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필두로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각각 1주일 간격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기본틀 마련(남북기본합의서 발효, 3개 분과위원회 발족·부속합의서 채택) → 실천·이행기구 구성(남북연락사무소 설치, 4개공동위원회 발족) → 공동위원회 가동 및 구체적 사업 실천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북한측은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도 핵문제 및 이인모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부속 합의서에 부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공동위원회의 활동에 장애요인을 제공하였음. 더욱이 북한은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각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한국측의 화랑훈련, '92 독수리훈련 등을 구실로 거부하였음.

- 한편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10.7~8,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은 남북상호핵사찰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북한은 이를 비난하고, 동훈련이 강행될 경우 대화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음 (10.12 외교부 대변인 성명, 10.13 조평통 대변인 성명, 10.14 연형묵 총리 대남편지 등).
- 또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주재대사의 기자회견(11.2, 10.29 및 11.14)을 통하여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제9차 고위급회담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음. 결국 제9차 고위급회담은 예정(12.21~24)대로 열리지 못하였고, 남북사이에 조성된 남북화해·협력분위기는 1992년 9월 이후 냉각상태로 전환되어 1993년 6월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3. 展望

- 北韓 核問題로 경색국면을 맞이한 남북관계는 7월 14일 제2단계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그 타개여부가 결정될 것으

로 판단됨.

- 北韓·美國 高位級會談에 대한 현재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지만 지난 1단계회담 분위기로 보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만일 2단계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이 진전된다면 향후 남북대화는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Ⅲ. 北韓의 特使交換 提議 및 撤回

#### 1. 概觀

- 북한 강성산 총리는 1993년 5월 25일 한국의 「고위급회담대표 접촉」 제의(5.20)에 대한 회신을 통해 ‘민족의 중대사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위해’ 양측 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特使交換을 역제 의함.
- 이후 특사교환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간에 13차에 걸친 서한 및 전화통지문교환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북한 강성산 총리가 지난 6월 26일 특사교환 제안을 철회 하였음.

## 2. 經過

### ○ 제1차 남측 제의

- 한국 황인성 총리는 5월 20일 「핵문제 및 남북현안」타결을 위해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제의함.

### ○ 제1차 북측 회신

- 북한 강성산 총리는 5월 25일 고위급회담 대신 첫째,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정상회담개최, 둘째, 양측의 현안문제토의, 셋째,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협의하려는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特使交換을 제의함.
- 특사의 자격은 통일사업을 전담하는 副總理級으로 명시하고, 특사교환을 위해서 차관급을 책임자로 한 두명의 실무자 접촉을 5월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만날 것을 제의

### ○ 제2차 남측 제의

- 북한의 수정 제안에 대해 황인성 총리는 5월 29일 특사교환 제의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남북대화의 기존 창구인 南北高位級會談을 유지할 것을 제의
- 남북 고위급회담 차관급대표의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장애물인 핵문제의 우선적 토의와 기타 남북간의 현안문제 및 북측의 새로운 문제제기를 실무적 차원에서 토의할 것을 제의

- 이를 위해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이 종료된 후 6월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만날 것을 제의하고 남측 실무자로 송영대 대표(통일원 차관), 이승곤 대표(핵통제공동위 남측 위원장) 및 4명의 수행원 명단을 통보함.

○ 제2차 북측 회신

- 북한 강성산 총리는 5월 31일, 제1차 서신에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核問題를 특사 교환방문시 토의할 수 있음을 표명하는 내용의 제2차 전화통지문을 황인성 총리 앞으로 발송
- 아울러 특사들의 교환방문을 실현할 방법만을 토의하는 실무자 접촉을 6월 4일 오전 10시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

○ 제3차 남측 제의

- 황인성 총리는 6월 2일 「핵문제 우선협의」원칙을 고수하면서 特使 交換訪問 問題를 실무자 접촉에서 다룰 수 있음을 수용
- 실무자 접촉을 6월 5일 오전 10시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

○ 제3차 북측 회신

- 북한 강성산 총리는 6월 4일, 실무자 접촉에서는 조건없이 특사교환과 관련한 실무절차(특사들의 방문일시, 편의보장, 신변 안전담보 등)만을 토의할 것을 제안
- 아울러 실무자 명단은 6월 7일 통보할 것임을 통고하고 6월 8일 오전 10시 「통일각」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

- 제4차 남측 제의
  - 황인성 총리는 6월 7일 핵문제 해결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 및 특사교환을 협의할 것을 제의
  - 6월 8일 남북 당국자 실무대표간 접촉을 제의
- 제4차 북측 회신
  - 북한 강성산 총리는 6월 8일 기존의 특사 교환방문을 위한 실무자 접촉 주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특사교환 실현시 韓半島 非核化 問題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
  - 실무자 명단은 접촉 전에 통보 할 것과 6월 10일 오전 10시 「통일각」에서 실무자가 접촉할 것을 제의
- 제5차 남측 제의
  - 6월 9일 황인성 총리는 核問題 解決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 및 特使交換을 협의할 것을 제의
  - 남북 당국자 실무대표간 접촉을 6월 10일 갖도록 제의
- 제5차 북측 회신
  - 강성산 총리는 6월 11일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협의 제의
  - 6월 15일 실무자 접촉 제의
- 제6차 남측 제의
  - 황인성 총리는 6월 14일 구체적인 토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 채 특사 교환방문을 위한 실무 접촉 제의

- 제6차 북측 회신
  - 북한 강성산 총리는 6월 15일 기존의 입장을 고수, 특사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만을 토의할 것을 강조하고,
  - 6월 24일 오전 10시 「통일각」에서 실무자 접촉 제의
- 제7차 남측 제의
  - 황인성 총리는 6월 22일 북측 제의를 수락, 「핵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만을 제안하고 6월 24일 오전 10시 「통일각」에 송영대, 이승곤 실무대표 파견을 통보
- 제7차 북측 회신
  - 북한의 강성산 총리는 6월 23일, 6월 24일 회담 불참의사와 함께 향후일정에 대한 추후 통보를 밝힘.
- 特使交換問題는 의제문제로 난항을 거듭한 결과 남한의 북한측 제의에 대한 원칙적 수용자세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00일기념 기자회견」내용과 「을지연습」개최 등을 이유로 6월 26일 북한의 강성산 총리가 특사교환제의에 대한 일방적 철회를 선언함.

### 3. 背景 및 意圖分析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을 발표(4.7)하여 이것을 내부통합용으로 선전하고 있었던 바, 남한의 특사를 평양으로 불러 통일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이 宣稱의 妥當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음.

- 남한의 신정부가 이인모노인 석방을 포함한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관계에 임하고 있어 특사회담 개최시 북한에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북한의 NPT 탈퇴 철회문제와 관련해 6월 2일 제1차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바, 남한과의 관계개선 시도를 회담의 유리한 성과도출을 위한 카드로 활용
- 북한·미국 고위급회담결과의 긍정적 평가와 김영삼 정부의 安保重視政策 표명으로 인해 남한을 전술적 제후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분석됨.

#### 4. 展望

- 북한은 남한 정부의 유화적인 자세를 이용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적실성을 공고히하려 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安保優位 發言 및 정부의 신중한 對北姿勢로 인해 목적달성의 어려움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대남통일 전선 구축차원에서 계속 활용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NPT 탈퇴선언의 중요 목적중 하나인 미국과의 직접협상통

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김정일의 위기관리능력을 부각시켜 後繼體制 鞏固化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결국 특사교환문제를 비롯한 각급 남북간 회담은 북한·미국 고위급 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한 전술적으로 활용될 뿐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IV. NPT 脫退宣言과 北韓·美國 高位級會談

##### 1. 概觀

- 북한은 IAEA 特別查察要求에 대한 반발로 지난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였음.
- 이후 북한은 UN으로부터 2차에 걸쳐 NPT 복귀권고를 받음.
- 그러나 북한은 核問題解決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하였고, 결국 뉴욕에서 제1차 북한·미국 고위급 회담(6.2~11)을 실현함.
-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NPT 탈퇴 선언을 유보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무력불사용, 내정불간섭, 평화통일」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共同宣言을 얻어냄.

## 2. 經過

- 북한은 1974년 IAEA에, 1985년 12월 NPT에 각각 가입한 후 18개월 이내에 全面安全措置協定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해오다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FSA 서명(1992.1.30)과 NPT 비준(1992.4.9)을 실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IAEA에 14개 사찰 대상시설을 포함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음(1992.5.4).
- IAEA는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관련 14개 査察對象 施設에 대해 1992년 5월에서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쳐 임시사찰을 실시하였음.
- 임시사찰 진행도중 북한의 최초 보고서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노출되고 자발적 협력이 미진함에 따라 북한 核武器 開發疑惑이 대두되게 되었음.
  - － 특히 IAEA 사찰단은 영변 부근의 급조된 2개 시설이 핵폐기물 또는 「사용후 연료 저장소」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혹을 표명하였음.
-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IAEA 사찰단측은
  - － 제3차 임시사찰시(1992.2) 14개 신고시설 이외의 2개소 방문을 요청한 바 있으며,
  - － 이어 제6차 임시사찰시(1993.2) 이에 관한 特別査察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음.

- IAEA의 특별사찰 수용압력에 직면한 북한은 NPT 탈퇴를 통한 NPT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강경책을 선택하였음.
  -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NPT 탈퇴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이를 정부성명으로 공식발표하였음.
  - 북한정부 성명은 ‘군사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 및 시한강요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음.

### 3. 意圖分析

#### 가. 戰略的 次元

- 북한의 NPT 탈퇴 목적은 1993년 3월 25일로 정해진 특별사찰을 회피함으로써 核開發 確證要素 捕捉을 회피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전략(Policy of Ambiguity)’의 실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의 핵재처리 능력, 플루토늄 보유 또는 사실상의 核保有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핵보유를 부인함으로써 북한은 핵보유 공개 이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실현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음.

- 실제로 北韓의 이러한 ‘불확실성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 － 최근 러시아나 중국이 군사동맹을 통한 北韓安保를 확실히 보장하기 보다는 약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장 위협을 가시화함으로써 특히 중국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대북한 방위보장을 유도케 할 의도였을 것임.
  - － 북한은 핵폭탄제조 가능성을 근거로 對美關係에서 외교적으로 미국의 대남한 군사지원(주한미군, 핵우산 체제,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을 것임.
- 북한이 NPT 체제에서 特別査察을 수용하여 그들의 핵능력이 공식적으로 판명될 경우 불확실성 전략의 이점을 상실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 핵개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제적 제재는 물론 반사이익이 상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특별사찰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을 것임.

#### 나. 短期 戰術的 次元

##### (1) 政治·外交的 目的

- 북한은 特別査察과 관련하여 NPT 탈퇴에 대한 IAEA 무력적 제재의 어려움을 간파하고 정치·외교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을 것임.
- 즉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명분이 취약함. 즉 “Breach of Peace,” “Threat to Peace,” “Aggression” 등 UN 헌장 제7장이 정하는 군사적 응징행위를 위한 조건의 불충분(이라크와 같은 침략행위 부재)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NPT 거부국가들에 대한 국제제재 부재로 인해 형평성문제 제기 가능성
  - 북한의 대남보복 가능성. 선의의 피해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제50조에 위배
  - 중국의 안보리 거부권행사 가능성
  - 다국적군 형성 난관(명분상의 취약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같은 석유를 통한 공동이익 인식 결여)
  - 미국 단독 군사행동 역시 미국내 여건상(여론, 예산) 애로점 존재
  -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 소유
  - 보복대상(한국)의 인접 등
- NPT 탈퇴선언과 관련한 북한의 정치·외교적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됨.
- 對外關係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간접적 핵보유국 인정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북·일, 북·미 關係改善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
  -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핵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 거론을 통한 입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대남 관계상의 攻勢的 地位를 확보할 수 있음.

## (2) 軍事的 目的

-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팀스피리트훈련으로 인한 대북한 긴장조성에 기인함을 강조함으로써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팀스피리트훈련의 永久中斷을 얻어낼 수 있음.
- 核의 불확실성 전략 추구를 통하여 북한이 유지해왔던 재래식 군사력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음.

## (3) 內部體制強化 目的

- 북한은 핵문제를 구실로 「준전시 상태」 선포 등의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반대세력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임.
- 특히 전쟁경험이 없이 인민군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 등 군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김정일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실질적인 지휘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正統性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 즉 새로운 군수통수권자인 김정일은 NPT 脫退宣言을 통해 고의로 위기를 조성,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직접협상을 벌여, 상징적 ‘승리’ 상황을 도출해 냄으로써 ‘위대한 영장’,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면모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었을 것임.

#### 다. 對北韓 國際的 壓力과 北韓·美國 高位級會談

##### (1) 對北韓 國際的 壓力: 北韓 核問題의 UN 安保理 上程

- 북한의 NPT 탈퇴이후 미국은 협상과 국제적 압력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NPT 탈퇴번복을 유도하였음.
- 미국은 북경에서 북한과의 제30차(3.17), 제31차(3.19) 참서관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번복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음.
-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4월 1일,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을 IAEA 이사회가 安全協定 不履行 國家로 규정하도록 함과 함께 북한 핵문제의 UN 안보리 상정을 결의케 함.
- 이어서 UN 안보리는 1단계의 조치로 NPT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지하며 核査察 問題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IAEA가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음(4.8).
- 이에 대해 북한이 공세적 입장을 견지하자 미국은 5월 5일, 5월 10일 연속으로 북한과 북경에서 접촉을 가졌음. 특히 5월 10일의 북한·미국 접촉에서 고위급회담 개최 원칙에 합의하였음.
- 동시에 安保理는 5월 11일 북한에 대한 NPT 탈퇴결정 재고 및 IAEA 사찰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제재조치를 경고하는 내용



의 제1차 결의안(제825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음.

(2) 北韓·美國 高位級會談과 北韓의 NPT 脫退留保

- 1993년 5월 17일, 5월 21일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을 위한 제1차, 2차 예비접촉을 가졌으며, 2차례의 예비회담 합의에 근거하여 북한은 1993년 5월 24일 고위급회담 개최일시(1993.6.2) 및 북측 대표단 명단을 미국에 공식통보하였음.
- 이어서 미국의 갈루치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한·미국간 고위급회담이 1차 회담후(6.2) 연속적으로 2차(6.4), 3차(6.10), 4차(6.11)에 걸쳐 UN본부에서 개최되었음.
- 제4차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NPT 탈퇴유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北韓·美國 共同宣言이 발표되었음.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 합의된 원칙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보장
    - 안전보장장치의 공정한 적용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전 보장
    - 상대방의 자주권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
    -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 쌍방 정부간 평등성의 기초 위에 대화지속

- 북한은 NPT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정지

#### 4. 展望

- 현재까지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 불확실성 정책(policy of ambiguity)으로 일관해오면서 核問題를 대미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였음.
- 특히 북한은 NPT 탈퇴라는 강경책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적 압력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선전하고 있음.
- 북한은 이러한 결과를 김정일의 정치적·군사적 지도력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 부각·선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기반을 공고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음.
- 아울러 이번 북한·미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은 核問題에 관한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구속력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려 할 것임.
- 반대로 북한은 핵카드를 통해서 북한·미국 협상차원에서 거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 향후 미국·남한·북한의三者關係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려 할 것임.

- 향후 북한은 핵문제를 수단으로 적극적인 대미협상을 벌임으로써 한·미동맹관계의 이완을 기도하고 이를 통해 남한 안보의 불안정을 유도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북한은 核問題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 남한을 협상 당사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남한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V.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宣言

### 1. 概觀

- 1993년 상반기 북한은 한국의 문민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년 초보다 감소시키는 동시에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새로이 제시하였으나, 대남선전선동매체를 통한 학생·노동자 등의 반미·반정부 투쟁에 대한 선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특히 신정부 출범 100일을 전후하여 민·관 이간차원에서 우리사회내의 각종 사건들에 대한 비방을 일층 강화하는 등 종래의 「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한 二重的 對南戰略을 변함없이 구사하였음.
- 북한 김일성은 NPT 탈퇴선언(3.12)으로 인해 회의 의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집중된 가운데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4.7~9)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후 「10대강령」으로 표기함)을 제시하였음.

- 이와함께 북한의 강성산 총리는 외세의존정책의 포기, 미군철수의 지의 표명,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중지, 미군의 핵우산으로 부터의 탈피 등 「남조선당국에 대한 4개항 제의」를 발표함.
- 이후 북한은 이 「10대강령」에 대한 동조세력 확보를 위해 남한측 인사들에게 편지공세를 펴고 각종 대남 선전선동매체를 통해 「10대강령」실천에 동참하도록 학생·노동자 등을 선동하는 등 「10대강령」은 종래의 「통일선전선술」에 기초한 이중적 대남전략의 새로운 지침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 「10대강령」을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北韓의 對南戰略 方向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임.
- 요컨대 북한은 이기간 초반 한국의 신정부에 대해 ‘파쇼정권’의 연장이라는 비난을 지속함으로써 그 正統性을 부인하려 했으나, 신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는 동시에 공존공영·민족복리 등 대북유화적 통일기조가 천명되는 한편 북한의 核武器 開發疑 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폭되자, 이에 대한 현상유지적 대응 차원에서 4월 「10대강령」을 발표하고 특사교환 등 각종 대남대화를 제의하였음.

그러나 북한은 「북한·미국 공동성명」(6.12)의 도출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特使交換 提議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음.

## 2. 「10대강령」의 內容

- 북한이 그동안 천명해온 중요 對南政策 方向은 다음과 같음.
  - 1970년대: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5대강령’ 제시
  -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 1990년대: 1990년 5월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강령’ 및 1991년 8월 ‘민족대단결’노선을 집대성하여 1993년 4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시
- 「10대강령」은
  - 궁극적 目標로서 ‘자주·평화·중립적(연방제)통일국가’ 창설
  - 이념적 기초로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
  - 단결의 원칙으로서 사상·제도·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공동의 최고이익에 모든 것을 복종시킴
  - 단결의 방법으로서 ‘공존·공영·공리의 도모’, ‘일체의 정쟁 중지’ 등 8가지를 제시함.
- 아울러 북한은 강성산 총리의 배경연설을 통해 「4개 대남요구사항」을 제시함.
  - 외세의존정책 포기
  - 남조선에서 미군철수의지 표명
  - 외국군대와 합동군사훈련 영원히 중지
  - 미국의 핵우산 포기

### 3. 意圖分析

- 제1항 및 5항에서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존하는 두제도 두정부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고 제안한 의도는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3항에서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겠다는 것과 7항에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종래 언급하지 않던 사항으로, ‘민족복리’, ‘공존공영’ 등 우리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화답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남북경협에 대한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9항과 10항에서 ‘북과 남, 해외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대남전략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이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4개 대남요구사항」을 주장한 이유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내세워
  - 첫째, 한·미관계 분열
  - 둘째,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
  - 셋째, 남북대화에서의 주도권 장악
  - 넷째,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를 통한 체제결속 등을 모

색한 것으로 분석됨.

#### 4. 展望

- 북한이 추구할 대남정책 전개내용을 분야별로 예측해 보면, 남북 대화와 관련, 북한은 북한·미국회담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核武器開發疑惑이 IAEA에 의해 해소되기 시작할 때, 특사파견 및 각종 대화에 응할 것임. 그러나 남북회담의 진전 및 남북한간의 실질적 관계개선은 북한의 「4개 대남요구사항」 제시로 인해 여전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對南 經濟政策과 관련, 북한은 대외경제 개방파인 강성산·김달현을 중용한 점과 각종 대외경제개방 관련 법령을 최근까지 계속 정비·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험 및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경제교류·협력이 북한체제에 대한 전복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정부의 대북경협 의도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제한된 한국경제계 인사들과의 교류만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統一戰線戰術과 관련, 북한은 1995년 「조국통일」 달성을 위해 1993년까지 통일전선 구축을 완료하려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하당 결성 뿐만 아니라 하층통일전선 차원에서는 '범민련' 활동강화를 부추기며 상층통일전선 차원에서는 재야인사·유명 정치인·

경제인·종교인 등의 방북추진을 南北經協 및 文化交流라는 명목 하에 적극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해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3년 광복절을 계기로 해외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철수 및 1995년 「조국통일」완수를 위한 투쟁결의를 재다짐하는 등 남·북·해외의 聯共勢力의 규합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 VI. 經濟交流 및 經濟協力

### 1. 概觀

- 1988년 10월 南北經濟交流가 시작된 이후 1993년 5월까지 반출입 승인총액은 5억 2,774만달러이며 그중 반입이 4억 8,145만달러, 반출이 4,629만달러임.
- 1993년 들어 5월까지의 南北交易 承認實績은 반입 7,114만달러, 반출 250만달러로 도합 7,354만달러임(작년 동기간대비 19% 감소).
- 통관실적(4월까지)은 작년 동기간대비 14% 증가한 5,776만달러로 반입 5,648만달러, 반출 128만달러임.
- 交易構造面에서는 바지, 자켓, 셔츠 등 봉제품 중심의 임가공교역 승인실적이 5월까지 243만 2천달러를 기록, 1992년 1년 총액 44만



2천달러를 이미 초과,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물자부족에 따라 교역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북한이 임가공교역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북한의 저임금노동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 크게 증가한 것임.

## 2. 經過

- 1993년 1월중 반출입신청은 34건 770만 3천달러이며 승인은 반입 25건 395만 6천달러, 반출 4건 39만 3천달러로 도합 29건 434만 9천달러임.
  - 반입승인품목은 21개품목으로 금괴, 은괴 등 귀금속류가 최다 반입승인되었으며, 반출승인품목은 5개품목으로 의류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가 대부분이고 기타 남성용정장, 마른김 등임.
  - 중개지는 반출입승인 29건 중 홍콩이 20건, 일본 5건, 중국 2건, 싱가포르 2건임.
  - 통관실적은 895만 4천달러로서 그중 반입은 821만 2천달러, 반출은 38만 2천달러이며, 주요반입품목은 금괴, 아연괴, 은괴 등이고 주요반출품목은 작업복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메탄올 등임.
- 2월중 반출입신청은 37건 2,340만 8천달러이며, 승인은 반입만 30건, 1,914만 2천달러임.
  - 반입승인품목은 15개 품목으로 아연괴, 금괴, 빌레트 등이 다

량반입 승인되었고, 평양소주, 면장갑, 인조꽃이 최초로 반입 승인되었음.

— 중개지별로 보면 반입승인 30건중 홍콩 24건, 중국 2건, 영국 2건, 일본 1건, 대만 1건 등임.

— 통관실적은 1,845만 9천달러로 그중 반입은 1,814만 6천달러, 반출은 31만 3천달러이고 주요반입품목은 아연피, 금피, 빌레트, 한약재, 주요반출품목은 LDPE필름임.

○ 3월중 반출입신청은 37건 1,865만 9천달러이며, 승인은 2월 신청분을 합하여 반입은 33건 1,756만 9천달러, 반출은 5건 46만 6천달러로 도합 38건 1,803만 5천달러임.

— 반입승인품목은 15개 품목으로 금피, 아연피, 은피 등이 다량 반입승인되었고, 들깨가 최초로 반입승인되었으며, 반출승인품목은 4개품목으로 메탄올, 라면외에 남자스웨터와 아크릴사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가 반출승인되었음.

— 중개지별로 보면 홍콩 18건, 일본 11건, 인도네시아 2건, 미국 2건, 싱가포르 2건, 중국 1건 등임.

— 통관실적은 1,347만 3천달러로 이중 반입은 1,296만 9천달러, 반출은 50만 4천달러이며 주요 반입품목은 금피, 아연피, 빌레트, 반출품목은 메탄올과 알미늄은박지임.

○ 4월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30건 1,239만 9천달러로서, 반입 1,190만 5천달러, 반출 49만 4천달러임.

- 주요반입승인품목은 금괴, 아연괴이며 주요반출승인품목은 설탕가루, 세탁비누 등 생필품과 바지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임.
  - 중개지별로는 홍콩 24건, 일본 3건, 중국 2건 등임.
  - 통관실적은 1,723만 3천달러로 이중 반입은 1,715만달러, 반출은 8만 3천달러임.
- 5월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42건, 1,834만달러로서, 반입 1,765만 7천달러, 반출 68만 3천달러임.
- 반입승인품목은 18개 품목으로 금괴, 은괴 등 귀금속과 아연괴가 다량 반입승인되었음.
  - 반출승인품목은 6개 품목으로 임가공 원·부자재가 대부분이고 기타 폴리에스터 직물과 조미료등임.
  - 중개지는 홍콩 38건, 일본 1건임.

### 3. 分析 및 展望

- 남북한 교역구조의 特徵은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위주이며, 둘째, 그나마 북한으로의 반출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셋째, 반출품목의 대부분은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라는 것임.
- 1993년 들어 5월까지 총교역규모(승인기준) 7,346만달러 중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6%에 달하는 바, 작년 동기간동안의 반입비중(90.9%)보다도 더욱 증가하였음.

- 통관기준으로도 4월까지의 총교역규모 5,576만달러중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8%로 승인기준에 따른 반입비중보다도 더 높음. <표-1 참조>

〈표-1〉 南北韓 交易

(단위: 만달러)

	승인기준(5월까지)			통관기준(4월까지)		
	반 입	반 출	계	반 입	반 출	계
1992	8,256	830	9,086	4,486	602	5,088
1993	7,114	250	7,364	5,648	128	5,776

- 남북한 교역구조상의 이러한 특징은 첫째, 북한당국이 남한상품의 북한유입을 꺼리고 있으며, 둘째, 북한이 남한제품과의 물물교환 형식보다는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한 현금결제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임가공교역은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후 가공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형태인 바, 북한으로의 반출품목이 대부분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의 상품반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남한의 총무역규모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1992년 기준 0.1%), 남한은 북한 총무역의 11.2%(1992년)를 차지하고

있음. <표-2 참조>

- 이러한 남북한 교역규모로 볼 때 작년의 경우 남한은 통관기준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에 이어 북한의 5대교역대상국이며, 특히 수출측면에서 보면 일본 다음의 두번째 교역대상국임.
  - 남북한 반출입은 대부분이 경화결제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한 반출은 외화획득원으로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1992년도 북한의 대외수출이 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남한 반출이 54%나 증가한 점으로 볼때, 향후 남북교역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북한의 심각한 經濟難, 특히 외화부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남북한교역의 확대는 북한으로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표-2> 北韓의 1992年 主要國別 交易實績

(단위: 천달러)

	수 출	수 입	수출입 계
중 국	155,463	541,107	696,571
일 본	257,393	222,894	480,287
러 시 아	65,200	227,100	292,300
이 란	120,000	140,000	260,000
홍 콩	48,622	106,988	155,610
한 국	162,864	10,499	173,362

하나의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핵사찰 거부와 NPT 탈퇴발표 이후에도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남북한 교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북한의 대남한 반출위주의 형태로 지속될 것이며, 임가공형태의 교역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남북한교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Ⅶ. 朝總聯 動向

### 1. 概觀

- 조총련은 재일조선인을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동조하는 친북한 세력으로 규합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주요 기능으로는 재일조선인의 단결 및 권리 옹호, 대북한 정치·경제적 지원, 주체사상 교육 및 대외선전, 일·북한간 우호·친선 도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國際情勢 變化로 일본내 조총련의 사상해이 및 조직약화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조총련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제고와 사상교육 및 조직강화를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음.

- 한편 經濟面에서 조총련은 재일조선 상공인들의 북한 경제건설 지원을 위한 합작사업, 첨단기술 이전 및 관광객 방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재계와의 교류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2. 思想 및 組織強化

### 가. 思想教育強化

- 조총련은 매년초 의장단과 산하 조직활동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열성자 대회를 열고 전년도의 조직사업 성과를 종합·평가하면서 김일성 신년사 및 「신년축전」 등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당해년도의 주요과업을 제시해 오고 있음.
- 조총련은 1월 9일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중앙열성자대회」를 열고 모두 6개항의 93년도 활동과업을 제시하였음.
  - －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및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제고
  - － 재일동포 조직사업 확대
  - － 재일동포 기업권, 생활권 옹호투쟁 전개
  - － 조국통일운동 강화
  - － 북·일수교 조기 실현 및 조국통일 지지 유도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 － 김부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

○ 조총련이 제시한 올해의 活動課業은 조총련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북한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조총련은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제고를 올해 수행과업의 제1순위에 올려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섯번째 항목에서도 재차 김부자 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김부자에 대한 충성 강조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 이유는 김정일이 1991년 12월 군최고사령관과 1992년 4월 원수로 추대됨으로써 사실상 김정일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됨에 따라 김일성보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둘째, 조총련은 1) 동포조직 사업 확대 2) 동포기업권·생활권 옹호 투쟁 전개 등 조직 내부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내에서 조총련의 위상변화 등에 따라 조총련조직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강화를 새로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 조총련은 組織強化를 위하여 1992년 정권 창건 일(9. 9)에 즈음하여 이른바 「동포방문 3개월 애국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음.

— 셋째,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일문제와 대일수교문제가 활동과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음. 이는 향후 조총련이 통



일문제와 대일수교를 위한 여건조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되 보다 절박한 문제인 조직내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돌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조총련은 올해 활동과업의 하나인 재일동포 조직사업 강화를 위하여 「동포방문 3개월 애국운동」과 같은 일련의 대중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조총련은 최근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인 일본사회의 풍조에 영향을 받거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북한체제 비판서적 등으로 인하여 계열동포들 사이에 1) 사상적 해이 2)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및 대북 지원의욕 저하 3) 조직이탈 등의 현상이 만연되자 계열동포들의 사상적 해이 방지와 조직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조총련은 최근 북한이 「준전시상태」(3. 9~24)와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선언(3. 12)으로 긴장된 분위기하에 놓여있음을 감안하여 각 지부와 전체 계열 동포들에게 ‘수령과 주체조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지하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심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81회 생일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조총련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3권) 및 「김정일 선집」(1~2권)에 대한 집중학습과 토론, 감상 발표모임 등을 진행하는 한편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학습과 해설 교양사업을 확대

해 나가고 있음.

#### 나. 組織強化

- 조총련은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제16차 전체대회(1992. 5. 21~23)를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한덕수 조총련의장의 중앙위 사업 종합보고와 중앙감사위 보고 및 대의원들의 토론, 조직구성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채택 등을 행하였음.
- 특히 김정일체제로의 전환기를 맞아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개최된 제15차 전체대회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조총련 조직이 위축되고 계열동포들간에 사상적 동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자에 대한 충성 다짐과 조총련 조직의 결속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 또한 이번 전체대회는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총련의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하였음.
  - 전반적 사업개선 및 조직정비
  - 한국민들의 통일투쟁 지원
  - 북·일수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애국사업(대북지원) 강화
  - 후비일군 육성
- 이번대회에서 큰 변화는 統一問題와 北·日修交를 위한 분위기 조

성 등을 활동방향 과제로 제기하였는 바,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변화한 데 기인함. 조총련은 향후 조총련계 동포들의 사상적 동요를 불식시키고 조직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정세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현실문제(北·日修交 및 對北韓 經濟支援 등)에도 비중을 둬으로써 북한의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조총련은 최근 김일성이 제시한 「10대 강령」 실현을 위한 조직·동원사업의 일환으로 「분회활성화 2백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중앙위원회 16기 2차회의(5. 11), 지방본부별 확대 간부회의(5. 19~21), 중앙상임위원회회의(5. 29) 등에서 「10대 강령」 실현방침을 결정하였음.

- 이와 관련, 조총련 지바현(千葉県) 본부의 경우 우선 1) 분과 위원회와 학습반의 정상화 2) 5호 담당제의 확립 3) 회비의 성실한 납부 4) 「조선신보」를 비롯한 자체 출판물 보급 확대 등의 운동을 「10대강령」 구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또한 「10대강령」 지지를 위한 재일상공인 중앙대회를 6월 8일 열었음.

- 또한 조총련은 조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외사업, 학생 유치, 애학운동, 선전물 지참 동포가정 방문 운동, 문화체육소조 운영, 동포간 관혼상제 돕기 등 14개 분야에 걸친 운동을 분회간 경연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음.

### 3. 對北韓 經濟支援

#### 가. 合作事業 및 物品送達

- 조총련은 1980년대 대북한 경제지원을 重點課題의 하나로 책정하고 조총련 상공인과의 대북한 합작사업 및 첨단기술 도입 그리고 각종 물자의 발송에 조직을 동원하고 있음.
  - 1986년 2월 이후 김일성이 조총련 상공인의 대북 합작사업 추진을 촉구한 이래 각 지방 상공회에 대해 1건 이상의 합작사업을 의무화하였으며 事業對象은 경공업 중심에서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관련분야의 합작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약 60~70여건(투자총액 300억엔)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조총련은 김부자 생일과 각종 창건기념일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공장·플랜트에서부터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자를 조직적으로 송달하였고, 계열동포 개인에 의한 물자발송도 장려하였음.
- 또한 조총련은 최근 357개에 달하는 각 지방본부에 대하여 오는 7월 10일까지 1건 이상의 각종 제품샘플과 관련자료를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하였음. 조총련은 북한의 經濟建設 支援을 위하여 각종 물자와 함께 일본의 과학기술 등에 대한 자료·도서·기자재 등을 수집·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에 시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필품을 중심으로 경공업부문의 제품과 그 원재료·부품, 생

- 산공정에 관한 설명서, 도면, 비디오, 사진 등을 함께 보낼 것
  -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내 상공업자는 물론 지방특산품 산업 및 업종별 협동조합, 산업전시관, 향토자료관 등을 조사하고 협력을 얻을 것
  - 재일조선인 「과학기술협회(科協)」 지부를 설치한 지방본부는 「과협」소속의 과학자 및 기술자를 활동에 참가시킬 것 등임.
- 조총련은 북한의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88~91)이 시작된 지난 88년에는 각종 샘플 20,000여점, 과학기술도서 10만권 및 건설기자재 및 공구류 66,000점(5억 6천만엔 상당)을 송부하였으며, 조총련 과학 기술자 80여명을 방북시켜 일본에서의 연구경험을 제공하였음.
  - 또한 조총련은 1990년초부터 대북물자송부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최말단 조직인 산하 각 분회에까지 품목과 수량을 할당하고 상공인 및 일본인 고철업자, 산업폐기물업자 등으로부터 기계, 설비 등을 염가 또는 무료로 입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최근 조총련 상공인들은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난 및 독재체제적 성격 등 부정적인 대북한 이미지로 인하여 朝總聯組織活動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있음.
  - 부정적인 대북한 이미지와 관련, 조총련계 학자인 이영화는 오

사카 대학 시나에 교수 등 20여명과 함께 「구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라는 북한 민주화 촉구 모임을 발족하여 (6.3), 북한의 인권상황과 경제난 등을 고발하였음.

#### 나. 募金運動

- 조총련은 산하 女盟조직을 통해 1992년 10월부터 1993년 5월까지 북한에 보건·의료기기 보내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각 지방 여맹본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조총련은 북한에 4억엔 상당의 최신식 보건·의료기기를 보낸다는 목표아래 조총련-북한 합영회사 제품인 「노아나」화장품 5만세트를 여맹 조직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 2억엔을 염출하고 나머지 2억엔은 여성 상공인과 상공인 부인들을 대상으로 모금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조총련이 산하조직을 동원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대북한 경제지원의 명분하에 靑島會社 제품을 조직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북한제품 애용운동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북한내 합영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금지원 요구로 인한 반발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상공인들에게 금융 및 세무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북투자 의욕을 진작시키고 있음.

#### 다. 食品보내기 運動

- 조총련은 식량과 생필품 등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송동포들을 위하여 지난 1991년 4월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북송동포 연고자들에게 식료품을 보내도록 장려하여 왔는데 최근들어 이같은 식료품보내기 운동을 강화, 쌀과 설탕 등이 포함된 식료품세트를 개발하여 희망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음.
- 조총련은 북송 동포들에게 식품보내기 운동을 니이가타에 소재한 慶和商事(대표 이재룡, 44세)에 위탁하고 있는데 현재 매월 약 200여개의 식료품 세트가 판매되고 있음.

#### 라. 日本人 및 在日同胞 觀光誘致

- 북한은 올해 조총련이 운영하는 中外旅行社(사장 강옥주)를 통하여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외여행사는 전세기(나고야-평양) 운항회수를 늘리고 관광객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일-북한간 直航路가 개설된 것은 1992년초부터 인 바, 1992년에는 10편의 전세기가 취항, 총 2,500여명의 여행자가 중외여행사를 통하여 북한을 방문하였음(1991. 600명). 또한 1993년에는 50편에 7~8,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마. 日本財界와의 交流 擴大

- 조총련은 2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조·일 경제인 신춘간친회」를 갖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친선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함.
- 조총련측에서 부의장 전연식, 허종만 등 조직간부들과 산하 경제단체 임원 및 상공인들이 참석한 간친회에서 전연식은 연설을 통하여 최근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총련 상공인들은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민들과 친선과 연대, 경제교류를 더욱 넓혀 갈 것”이라고 말함.
  - 전연식은 조총련 산하 상공인단체인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가 그동안 1) 한반도의 평화통일 2) 북·일관계개선 3) 계열동포 상공인들의 권익옹호 등을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3당공동선언」(90. 9) 이후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친선관계가 한층 강화된 사실에 대하여 일본측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시하였음.

#### 4. 教科課程 改編

- 조총련은 최근 일본사회에의 적응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산하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을 93~95년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교과과정 내용 개편과 관련, 우선 일본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록 일본어와 일본역사·지리 그리고 영어교육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일본의 초·중·고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기초과학과 정보기초교육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정보과목을 중급학교(연간 35시간)와 고급학교(연간 70시간)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기술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시간 편제를 조정하고 있음.

- 조총련학교의 敎科內容은 1946년 4월 확정된 이후 전후 3차례(68, 77, 83)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 김일성 예찬 2) 반일 대남혁명의 필연성 및 정당성 선전 및 해설 3) 미·일 제국주의와 반한투쟁 독려 등에 중점이 주어졌음. 수업시간 배분도 「국어」교육이 연간 26.6%를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역사·지리」 및 「도덕」시간을 비롯한 다른 교과서의 미·일 비난교육 등을 합하면 약 50%의 교육을 「민족·사상교육」에 할애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교육은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의 진로 및 일본사회 적응에 적지 않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81년 2만 6천명 → 87년 2만명 → 92년 1만 7천 4백명). 조총련은 중앙교육국내에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설치, 구체적인 교과개정에 관한 검토를 진행해 왔음.
- 그러나 이번 조총련의 교과과정 개편추진은 이념중시와 북한경제

건설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요구하는 북한의 교육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단기간내에 기존교육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개편될 교과과정은 종래보다 실용적인 교육내용이 증대되어 있기 때문에 조총련 3세들에게 어느정도 개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5. 展望

- 향후 조총련은 약화된 조직강화를 위하여 조직정비 및 사상교육 그리고 대북한 지지 정치모임을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조총련은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합영사업 권장, 모금운동 전개, 일·북한 수교 배후지원 등 경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  
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  
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  
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  
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1(1992)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

##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統一情勢分析 93-03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7월 일

發行日 1993년 7월 일

---

---